



## 11월 2일(금) 17:00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- \* 공동배포 : 전라남도, 중소기업음부즈만, 목포상공회의소  
중소기업중앙회(본부,광주·전남지역본부),
- \*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

담당

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

팀장 최무근, 전문위원 김지수  
(02-6050-3371, 3363)

##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, 「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」 개최

-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, 전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

□ 국무조정실(실장:홍남기)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2일(금) 오후 「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」를 열어,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\* (참석)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, 박주봉 중소기업음부즈만,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,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·전남지역 본부장 등

○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\*은 강원도(7월), 부산광역시(8월), 전라북도(10월)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남도, 중소기업음부즈만, 목포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중앙회 광주·전남지역본부 공동으로 「전남지역 현장간담회」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,

\* '13.9월 국무조정실, 대한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

-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국토교통부·보건복지부·해양수산부·환경부·경찰청·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-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필요
  -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필요
  -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 시간(2시간 전 통보) 완화 필요
  -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
  -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하여 완화 조치 필요
- 참석한 기업인 등의 건의를 경청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.
  -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,
  - 최근 전라남도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,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
□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·조정해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,

○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영남·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(붙임1) 「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」행사개요

(붙임2) 지역별「규제혁신 현장간담회」규제개선 주요 추진 내용

※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

- **일 시** : '18. 11. 2(금) 14:00 ~ 16:00 (120분)
- **장 소** : 전라남도청 회의실(서재필실, 9F)
- **주 최** : 국무조정실, 전라남도, 중소기업음부즈만, 목포상공회의소  
중소기업중앙회(광주·전남)
- **참석자**
  - (정부·지자체) 국무1차장(주재), 중소기업음부즈만, 추진단부단장,  
전라남도 행정부지사, 관계부처 국·과장
  - (유관기관) 목포상공회의소 회장,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
  - (민간) 규제개선 건의 기업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
- **주요내용**
  - 전남지역 현안규제·기업현장 애로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
- **세부일정**

시 간		주요내용	비 고
14:00~14:03	(3')	개회 및 참석자 소개	사회자
14:03~14:10	(7')	인사말씀	국무1차장, 전라남도부지사 중소기업음부즈만
14:10~14:15	(5')	정부 규제혁신 추진 내용	추진단 총괄팀장
14:15~15:55	(100')	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논의	국무1차장, 관계부처 국장 등
15:55~16:00	(5')	마무리말씀 및 폐회	국무1차장

□ **제1차 강원지역 현장간담회** (\* 7.19, 강원 퇴계농공단지)

건의과제명	소관부처	주요내용
드론 자격증제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	국토교통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을 위해 드론자격 및 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드론 자격 및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('18.9~)</li> </ul>
도선사 자격요건 완화	해양수산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선사 자격기준 완화로 도선사의 적정수급 지원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선사 자격요건 중 선장 승선경력(5→3년) 완화 - 도선법 개정('18.9.18 개정, '18.12.19 시행)</li> </ul>
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민간투자 지원	해양수산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 광석부두(5만톤급) 1선석을 잡화부두(5만톤급) 1선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 촉진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동해항 잡화부두 변경 결정('18.8.30)</li> <li>· 동해·묵호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('18.9.14)</li> </ul>
공공구매 심사 및 계약 간소화	조달청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달물자 구매입찰 서류제출시 대체기술보호가 되도록 부표전문은 생략하고 식약처에서 발급한 허가증만으로 제품의 적격성 평가요청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부표내용을 간소화하여 조달물자 구매입찰 정정공고</li> </ul>
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	식품의약품 안전처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약외품 분류 중 나목의 기피제 및 가정용살충제와 같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학과 학위자나 제조관리 유경험자로 자격 완화를 요청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외품(살충제등)은 제조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예정('19.1.1.)</li> </ul>

□ 제2차 부산지역 현장간담회

(\* 8.16, 부산상공회의소)

건의과제명	소관부처	주요내용
소규모업체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	환경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양성교육 후 자격 부여 요청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(제27조) 개정 추진 → 시행규칙 개정 완료('18.10.26)</li> </ul>
화물차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허용	국토교통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,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캠핑카로의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음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제한 개선,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「자동차관리법령」개정 추진</li> </ul>
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	해양수산부 해경경찰청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톤 이상 수상레저기구(보트, 요트 등)를 조종하려는 자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수부가 발급하는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(한정면허)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수부를 별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종면허와 한정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, 두 부처 간의 자료 또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→ 간소화 방안 마련 부처협약('18.8.30), → 기존 2개에서 1개 기관 방문으로 발급 절차 간소화 ('19.1월 시행 예정)</li> </ul>
산업단지내 정보 서비스업 기준 건축면적을 완화	산업통상 자원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의 기준건축면적을 현행 40%에서 20%로 완화 요청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리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20% 범위내에서 기준건축면적을 완화하는 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개정('18.5.10)</li> </ul>

□ 제3차 전북지역 현장간담회 (\* 10.2, 전주상공회의소)

건의과제명	소관부처	주요내용
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KS 표준화 마련	산업통상 자원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장내부용 물류운반차(지게차) 운용을 위한 고분자 연료전지를 개발하였으나, KS 표준* 지정이 없어 상용화 과정이 어려움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정(안) 마련 후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표준 개정 ('19.상반기)</li> </ul>
수열에너지 인정범위 재검토	산업통상 자원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행 수열에너지 범위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해수를 이용한 발전온배수만 포함되고, 호소수하천수 등의 온도차 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음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5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('19.5월)을 계기로 기술적·전문적 검토를 거쳐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재검토</li> </ul>
농촌관광 거점마을 체험휴양시설 행위 규제 완화	농림축산 식품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마을공동체와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숙박시설, 승마장, 음식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체험시설 조성애로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조실·부처·지자체간에 조정회의 통하여 해당 체험시설이 지자체 승인 후 추진 가능하도록 협의('18.10.15)</li> </ul>
유어장의 지정 제한 완화로 어촌관광 활성화	해양 수산부	<p><b>건의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이용한 유어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전통어법(석방렴)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불가</li> </ul> <p><b>추진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행 법령상 독살(석방렴)은 건간망(허가어업)으로 해석되므로 현재에도 독살을 이용한 유어장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</li> </ul>